2026. 11. 26.(목) 10:00
(제301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산시의회의 새만금항 명칭 변경 요구 철회 및 지역갈등 조장 중단 촉구 결의안

김 제 시 의 회

군산시의회의 새만금항 명칭 변경 요구 철회 및 지역갈등 조장 중단 촉구 결의안

(오승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6 - 149

발의연월일 : 2026. 11. 26.

발 의 자 : 오승경, 이정자, 김승일, 김진수, 오상민, 최보선, 유진우, 주상현, 김영자, 김민완, 장민우, 문순자, 손정애, 정경원 의원(14명)

1. 주 문

붙임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존 군산항의 공식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하며, 두 항만을 아우르는 광역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결정하였음.

❍ 그럼에도 군산시의회는 군산항 명칭이 삭제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신항과 광역항만의 명칭을 각각 ‘군산신항’과 ‘군산항’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군산시의회의 명칭 변경 요구와 소송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일관된 항만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적법한 의결에 따른 '새만금항 -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체계를 유지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 군산항의 공식 명칭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광역항만과 새만금항 신항의 명칭까지 군산으로 변경하려는 군산시의회의 지역 이기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함.

❍ 국가관리무역항의 운영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은 별개의 문제이며, 관할 결정을 항만 명칭 변경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함.

❍ 군산시의회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3개 시·군의 상생을 저해하는 소송 위협과 지역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4. 참고사항

❍ 결의문 : 별첨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개발청장

군산시의회의 새만금항 명칭 변경 요구 철회 및 지역갈등 조장 중단 촉구 결의문

새만금항 신항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새만금개발과 전북의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며, 기존 군산항의 단순한 확장항도, 군산시에 종속된 항만도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광역 국가관리무역항 '새만금항' 지정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기존 군산항의 명칭을 유지하면서 새만금항 신항을 함께 아우르는 광역 항만체계를 구축하여 두 항만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 항만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의 명칭이 지워지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새만금항 신항의 '군산신항' 격하, 광역항만의 '군산항' 명칭 부여라는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심의·의결한 광역 항만체계의 방향을 특정 지역의 명칭으로 대체하겠다는 요구이자, 새만금의 공동 발전이라는 큰 틀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주장이다.

국가의 미래를 지역의 울타리에 가두고, 공동의 성장 기반을 지역 간 쟁탈전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로서, 상생이 아니라 갈등의 재생산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백년대계인 전북의 미래와 새만금의 가치를 위한 국가항만의 명칭마저 특정 지역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군산시의회의 지역 이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은 조성 목적과 위치, 배후권역 및 담당 기능이 명확히 다르다.
군산항은 기존 산업과 전통 물류를 지원해 온 항만인 반면,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에너지·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과 환황해권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되었고, 앞으로 새만금 산업과 전북 미래 물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국가항만이다.

이를 억지로 '군산신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된 항만의 목적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독자적 기능을 가진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에 불과하다.

'새만금'은 단순한 사업명이 아니다. 수십 년간 법률과 국가계획, 정부기관과 산업단지, 도로와 국제공항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온 국가적 브랜드이자 김제·군산·부안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희생과 염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롯이 담긴 공동의 이름이다.

'새만금항'은 어느 한 지역의 독점적 권리를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라, 전북 전체와 새만금의 미래 가치 및 확장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명칭이다.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정한 것일 뿐,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과 운영체계까지 군산시에 귀속시킨 결정이 아니다. 국가항만의 지정·운영은 국가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더욱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권이 최종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항만의 이름까지 군산으로 변경하라는 것은 법적 판단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억지 주장이다.

군산시는 과거 관할권 독식을 꾀하며 기능과 성격이 다른 두 항만을 억지로 묶어 '원포트(One-Port) 체계'를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국가가 정당한 절차로 지정한 광역항만 명칭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새만금 2호 방조제 등 김제 관할 결정에는 극렬히 반발해 온 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만금항 신항 관할 결과가 나오자, 김제와 부안을 향해서는 '승복과 분쟁 종식'을 강요하고,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항만 명칭 앞에서는 또다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대승적 화합'을 외치고, 불리할 때는 법적 칼날을 겨누는 이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자가당착이다.

김제·군산·부안의 신뢰와 피땀 어린 합의로 출범해야 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필요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관할권에 이어 항만의 이름과 정체성까지 지역의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오만한 발상을 더 이상 '상생'이나 '지역발전'이라는 포장지로 위장해서는 안 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시만의 항만이 아니라 새만금과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물류를 위한 국가적 기반시설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김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고 ‘새만금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군산시의회의 지역 이기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의 공동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고, 행정구역 관할 문제와 국가 항만정책의 명칭 문제를 혼동하여 지역 간 갈등을 확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 지역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새만금항’ 체계를 확고히 유지해 항만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새만금항 신항을 전북의 미래항만으로 육성하라.
(육성하라! 육성하라! 육성하라!)

2026. 11. 26.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